

벌써부터 썩은 내가 풍진다

《민생을 힘을 다해서 지켰다》,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위대는 소리다.

소리는 요란한데 실속은 과연 어떠할까?

윤석열이 발표한 새 《정부》의 장관후보자들을 보면 가늠이 간다.

장관후보자들이라는데 자기 인맥을 위주로 내정한다. 능력과 경력, 전문성이 결여되었거나 은퇴 부패의혹으로 얼룩덜룩한 인물들이니 말이다.

실례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후보자는 어느 한 대학 총장노릇을 하면서 학생들을 잘보고 무시하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내뱉고 자격 미달의 학생에게 높은 점수와 장학금을 주었다는가 하면 10여만US\$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골프장과 식당 등에서 탕진하여 검찰수사까지 받은 자이다.

최근에는 그의 딸이 남조선의 어느 한 재단으로부터 2년간 1억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받은 사실, 그의 아들도 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

어 《아빠찬스》라는 사회적 논란이 고조되고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느 한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4년 4개월간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많은 월급을 받았으므로 하여 의문이 증폭되고있으며 800만US\$ 어치의 서울시내 주택들을 사들여 미국회사들에 임대해 주고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먹은 의혹, 미국주재 남조선대사로 있으면서 업무비용을 골프와 선물구입비로 탕진한 의혹, 처가가 청계천일대의 토지를 주변시세보다 높게 팔아 수백만US\$의 이익을 챙긴 것 등 각종 특혜의혹들이 제기되고있다.

이외에도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제법들과의 결탁의혹으로 집중공세를 받고있고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편의의혹을, 국방부 장관후보자는 판사에 거주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등 장관후보자들이 각자 각종 부정추문혐의를 받고있다.

한마디로 부패후보자들이 엮어놓은 부패《정부》가 출현하게 될 판이다.

윤석열자체가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부패혐의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던 장관후보자들이 역시 자기와 신통히도 같은 인물들을

선발할것이다.

《특진특혜》, 부정부패속에 배양된 이런 위정자들에게 민생의 위박한다는것은 승냥이에게 아이를 맡기는것보다 더 어리석은것이 아니겠는가.

하기에 남조선 각계가 《차고나면 터져나오는 윤석열내각후보자들의 의혹이야말로 당선인이 말하는 《부패판관》에 다름없다》, 《중요한것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지 여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윤석열은 초호화취급식행사와 같은 보여주기엔 연연할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일할 내각인선에 집중하길 촉구한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다.

부패당선인에 부패《정부》, 벌써부터 썩은 내가 물선물선 풍진다.

본사기자 김광혁



남조선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문제가 벌써부터 사회적 논란거리로 되고있다.

윤석열이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개방에 빚대고 취임식만찬을 고급호텔에서 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의 각계층은 반대와 비난일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차량 558대 동원해 고급호텔에서 만찬을 여는 윤석열의 취임식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랐다.

비용도 역대 최대 금액인 33억 1800만원이나 드는 《초호화세치》라고 한다.

남조선 각계층에서는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간다》, 《통제로 전세낸 고급호텔의 화려한 빛나는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최

고급차량 558대 도로를 가로지르며 국민원성은 더 높아질것》, 《지금도 총청명성 취임연회를 할 때가 아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 이통권을 호소하는 장애인,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달라》는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하지만 윤석열패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비용이 그리 많지 않다, 불과 50만 원이 더 추가된것이다. 정치공세다라고 두들기고있다.

이렇게 취임식만찬에 수십억원을 탕진하면서 윤석열패들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강건히 불보듯하고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지불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있는것도 그러한 채라고 할수 있다.

윤석열은 자기가 당선되면 과산직전에 이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100% 보상해주겠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수염을 빼냈고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푸는 경우 경제전반에 곤경에 빠진다는 것이 이유이다.

두기 윤석열이 현재의 물가가 심상치 않다고 하면서 물가안정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떠들고있으니

남조선 《국회》라고 하면 누구나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먼저 생각할것이다.

당리당락과 정치적리속을 노린 여야사이의 《국회》란 투구가 이런 오명을 만들어졌고 출판계의 좋은 보도감으로, 사람들의 즐겁지 않은 구경거리로 되어온것도 사실이다.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을 둘러싸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여야사이의 싸움은 남조선 《국회》의 동물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알려진것처럼 검찰의 수사권박탈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갈등과 대립은 극도에 달하고 그로 하여 정국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있다.

이에 대한 인민들의 시선은 포지 못하다.

남조선에서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물가상승 등으로 하여 민생이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급속히 오르면서 남조선에서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해 4.1%로 올랐으며 이것은 10여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것으로 된다.

서민의 장바구니물가라고 일컫는 생활물가상승률은 5%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어섰다.

상점들에서는 소비자들이 부쩍 오른 가격을 보면서 상품을 살지말자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흔히 볼수 있다고 한다.

연유가격도 상승하여 주민들속에서는 차를 정도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있다.

이들 의식해서인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가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 하기도 하였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아있는 《6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유예대 부정부패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하고 1년 6개월후에 수사전담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여야는 이같은 중재안을 4월 립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관련법제정안은 공포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경호원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며 회의장시설물들이 파손되는 등 말그대로 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야사이》에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대충출을 예고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보다싶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갈등은 또 다시 《국회》를 《동물국회》, 《폭력국회》로 만들기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해나섰으며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나섰다.

《검수완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해나선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합

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쪽에서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면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법안중재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들이밀어 회의장을 둘러쌌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의사를 두드리자 회의장에서는 상대방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과 삿대질이 쏟아졌고 회의장에 들어오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경호원들간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으며 회의장시설물들이 파손되는 등 말그대로 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여야사이》에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대충출을 예고하고있다》고 평하였다.

보다싶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갈등은 또 다시 《국회》를 《동물국회》, 《폭력국회》로 만들기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재검토를 주장해나섰으며 여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나서서 중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해나

《검수완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해나선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합

비난방기 《형세잔치》

《동물국회》, 《폭력국회》

미친물가, 몰락하는 민생

규탄받는 여성혐오정치

얼마전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이 《차별의 존재 부정 말고 여성가족부를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 폐지. 단 일곱 글자로 던진 화두가 점점 무거워지고있다. 정부예산 0.2%에 불과한 작디작은 부서 여성가족부는 선거판이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들의 입걸에 오르내린다. 때로는 청년총공약으로, 때로는 전체 부처개편의 일환으로 모습을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다. 20대대통령선거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등장했다. 그 과정에 윤석열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녀가보는 역사적소명을 다했다》 등의 발언으로 해체를 공약했다. 해체론은 당분간 후순위로 미루어졌다. 윤석열당선인은 해체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는 6.1지방선거를 의식한, 또다시 정치적판단의 결과다.

여성가족부해체를 뒤받침하는 전형적인 주장은 아

동, 청소년, 가족관련기능은 보건복지부에, 여성고용문제는 고용노동부에 넘기면 된다고 한다.

자신을 성폭력피해자라고 밝힌 한 여성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말하기대회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털어놓을수 있는 곳이 너가판이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들의 입걸에 오르내린다. 때로는 청년총공약으로, 때로는 전체 부처개편의 일환으로 모습을 달리했지만 본질은 같다. 20대대통령선거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론은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등장했다. 그 과정에 윤석열당선인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녀가보는 역사적소명을 다했다》 등의 발언으로 해체를 공약했다. 해체론은 당분간 후순위로 미루어졌다. 윤석열당선인은 해체공약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로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이는 6.1지방선거를 의식한, 또다시 정치적판단의 결과다.

여성가족부해체를 뒤받침하는 전형적인 주장은 아

를 보느라 당선인도 장관후보자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글은 윤석열이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를 지명했는데 폐지를 공언한 부서에 장관을 임명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면서 이것은 그의 《정치적선택》이라고 지적하였다.

6월지방자치제선거를 의식한 조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미루는 정치적판단이라는 것이다.

폐지를 주장하는자들이 자신이 없으니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장관을 내세우는 비정당한 방식의 싸움을 선택했다는 전문가들의 평도 인용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가 지방선거가 지나간 이후 서서히,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를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지난 《대전》에서 성별갈라치기 맛을 본, 그러나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6월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를 《계속》, 즉 먹기는 싫고 버리기는 아까운 《닭의 갈비》 취급하고있는 것이다.

옛 정권이 군주가 백성을 버릴같이 여기면 백성을 그들 원수로 대한다는 말이 있다. 여성들을 한갖 로동도구나 성직상대로 여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민생의 더 큰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본사기자

일본의 극우보수주의자들이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폄하하는 발언을 또다시 벌여놓았다.

일본수상이 앞장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폄하했으며 이전 수상과 《모두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의 100여명이 무리로 야스쿠니신사 참배하는 망동을 부렸다.

역사의 시공창속에 치박힌 《야스쿠니신화》, 《야스쿠니정신》을 되살려 군주주의부활, 해외제국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심나라 정치단체들이 가려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전몰자들의 위패가 있는 사당이다.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전염병을 비롯한 재해를 부르기에 문에 영혼을 진정시키려면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는 토속신앙을 기초로 세워진 《도교초혼사》이고 그 종교시절로부터 왜왕승배사상과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군주주의부활의 사상성정적거점으로 변이된것이 야스쿠니신사이다.

애왕을 위해 싸우면 실사전장에서 죽더라도 영혼만은 《야스쿠니의 신》으로 되어 《영생》한다는것이 《야스쿠니신화》, 《야스쿠니정신》이다.

도조를 비롯한 특급전범들과 군주주의망령들의 위패가 있는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는 결코 일본의 내정문제로만 될수 없다.

침략전쟁과 과거죄악에 대한 일본당국의 역사관, 미래관을 관변하는 척도이고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후에도 일본의 군주주의광신자, 후계자들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를 정례화, 전통화하여왔다.

특히 일제패망일인 8.15가 오면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닛폰도》에 《일장기》를 든 《황군》들이 야스쿠니신사에 모여들곤 하였다.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참배를 통하여 전범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정신을 이을것을 다짐함으로써 자국내에

군주주의정신을 고취하고 제정하고 령도정책야망을 합리화, 합법화하는것이 그 목적이다.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대들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조상들처럼 《대동아 공영》을 위해 《사우라이정체》으로 돌진하다 《사우라꽃》처럼 《우체》하여 야스쿠니신사에 《신》으로 돌아와 《영생》하는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것을 강요하기 위함에도 있다.

제한된 몇몇이 아니라 모든 일본인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그들을 철저한 군주주의후예들로 정신무장시켜 해외침략에 내몰려는 극우보수정객들의 전쟁광증, 정신분열증으로 하여 오늘 일본사회에는 과거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전범자들의 《넛》을 이어가려는 군주주의사상이 만연되어가고 있는것이다.

한일봉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정하고 령도정책야망을 정당화하는 일본당국의 역사외곡책동도 그 일환이다.

얼마전에도 일본은 조선민족의 령도인 독도를 저들의 《고유령토》로,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징용피해자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립장을 강력히 요구해나왔지만 결코 쫓아박은 《외교청서》라는 편을 발견하였다.

피터된 죄악에 대해 사회와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 일본의 령도정책야망과 재침야망을 이토록 집요하고 파렴치하다.

일본의 군주주의광신자들은 조선민족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경고를 외면하고 군주주의부활에로만 질주하다가 과거의 쓴맛을 보게 될것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일봉

